

2020년 03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7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3 (Vol.57)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4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백혜인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산·재생에너지 설치 대상 및 기준 개정 고시
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
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2020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3D 디지털국토 관리 가시화
국토부, 3기 신도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 발표
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광주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울산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경남도,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제주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10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사례집 발간
국토부,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실험 공모, 최대 1억 원 지원

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추진
서울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단체,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대전시, 올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동
광주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강원혁신센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모집
충북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본격 추진
충남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드론' 투입, 현황 점검
전북도,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 7개 마을 선정
경북도, 지역관광의 차별화된 성공모델 추진
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세종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승인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9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
행복청, 분기별 안전사고 하자제로 협의회를 통해 공공건축물 안전·품질 확보
부산시,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전남도, 도시재생컨트롤타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3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공급과, 2020.03.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 (현행과 같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상 및 기준 개정 고시

녹색에너지과, 2020.03.25.



서울에서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 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 된다.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 SOFC(Solid Oxide Fuel Cell) : 고체(세라믹)를 이용한 연료전지로 가장 발전효율(전기 및 온수 생산)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림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하는 것 외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

건축주택과, 2020.03.11.



광주광역시시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고층·고밀의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정비한다.

새롭게 정비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3월 중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비된 심의기준은 첫째,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한다. 둘째, 고층·고밀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한다. 셋째,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를 주변과 연결되도록 개선한다. 넷째, 안전, 무장애 및 친환경 요소를 개선한다. 이 기준들을 도입하는 단계에는 사업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건설행정과, 2020.03.24.

완료

건축
정책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4월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2020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3D 디지털국토 관리 가시화

국토정보정책과, 2020.03.06.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금년 1호 발사)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20만 필지 정비),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서울, 대구, 성남 등) 등이 추진된다.

* 3차원 공간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성장산업들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치기반 서비스산업의 핵심기반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3D 통합지도(수도권 25개 시) 확장,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2,753억 원),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1,46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 발표

공공택지기획과, 2020.03.30.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구분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면적	1,134만㎡	649만㎡	335만㎡
호수	6만6천호	3만2천호	1만7천호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자족+주거+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거재생과, 2020.03.02.



인천광역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 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건설행정과, 2020.03.25.



광주광역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책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대책 지속 추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과 민·관협력 도모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울산시,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건설도로과, 2020.03.06.

진행

건축
정책

울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비전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 1% 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과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로 짜였다.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사회적경제과, 2020.03.20.

진행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고령화, 저출산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의 내실 있는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시군 1센터를 목표로 올해는 5개소를 공모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 마을 행복디자이너를 올해 50명, 오는 2022년까지 200명을 양성해 마을별로 배치한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지난해 172개소에서 올해 374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시군별 찾아가는 마을학교, 시군 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건설지원과, 2020.03.16.



경상남도가 침체한 지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수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제도운용 확대,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도로관리과, 2020.03.2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8년 8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현황 및 지장물 실태조사,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사항,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사항,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 보도자재의 재활용계획 수립,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교통안전 및 보행과 관련한 주요계획들과 연계하여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도시재생경제과, 2020.03.15.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동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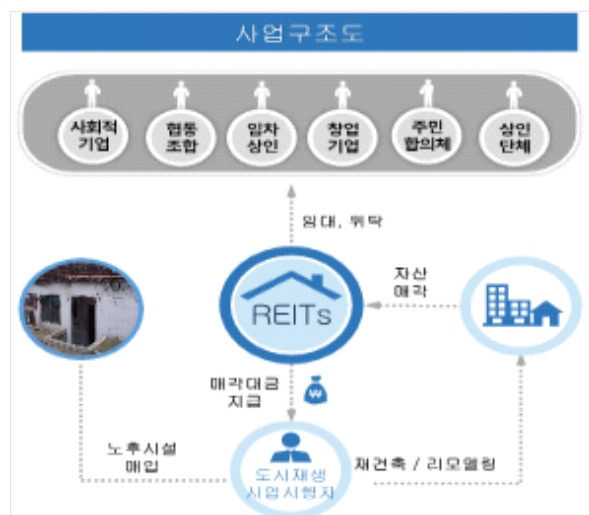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 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 임대료 인상을 연 2.5%이내로 제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사례집 발간

도시재생역량과, 2020.03.1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 중 30곳을 선별하여 「2020 도시재생사업 30選」이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그간 흩어져 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첫 시도로서, 해당 모범사례들을 공무원·센터·일반 주민 등에 공유하여 각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14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중 지자체가 추천한 사례를 지역별로 선별하고, 구체적인 성과 및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출 하여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토부, '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녹색건축과, 2020.03.27.



국토교통부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 에너지건축 주택단지이다.

* zeRO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주거

세종 로렌하우스는 '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으로 선정된 뒤, '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하였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19.12. 예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18.12)

** 세대당 월평균 전기료 약 7천원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실험 공모, 최대 1억 원 지원

전환도시담당관, 2020.03.04.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소비 중심에서 생산 도시로 전환을 위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 순환(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등),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탈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하여 전환적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7월 ‘팹 시티* 파리 정상회의’에서 ‘팹 시티 서울’을 선언한 이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순환경제 도시, 공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 팹 시티(Fab City):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지식, 정보 등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제 운동

보조금은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프로젝트당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5~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추진

동북권사업과, 2020.03.13.



서울시가 근현대 역사와 자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4.19사거리 일대 역사, 자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4.19 권역 및 우이동 권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한다. 2022년까지 조성된 거점을 활용, 방문수요를 지역경제로 연계하는 마을기업 실현을 위한 브랜드 구축이 목표다. 용역은 4.19사거리 일대의 차별적 인지도 확산 및 방문 경쟁력을 강화한 4.19 도시재생 브랜드를 개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9 도시재생 브랜드개발 용역’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03.13.



서울시는 행안부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민간건축물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하여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단체,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전환도시담당관, 2020.03.18.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기업 및 단체 지정과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들을 공유 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은 공유기업 및 단체로 지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뉘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이외에 지정 공모 사업으로 쓰레기를 줄이고(리듀스, 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리유스, REUSE),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리사이클, RECYCLE) 자원 순환 사업 및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공유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올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동

재난관리과, 2020.03.11.

진행

건축
정책

안전

대전시는 규모와 횡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진에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구에서는 2020년도 내진율 7.8%향상을 목표로 소관시설 208곳에 172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진보강과 같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이어 시민들이 만약의 지진에 대비한 대응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대피훈련·매뉴얼정비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주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

고령사회정책과, 2020.03.11.

완료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한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포용, 고용, 소통,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후에는 회원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정책 정보,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해 고령친화도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3년 동안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문화, 돌봄·인권, 건강·의료, 생활환경 등 5개 영역, 50개 세부과제를 적극 실행함은 물론 과제별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어르신과 시민들의 평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 3년 뒤 재인증을 위한 기반을 준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시주택과, 2020.03.12.



도시
정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강원혁신센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모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0.03.12.



도시
정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의 유희공간이나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일반 바우처 트랙과 투자 연계 트랙으로 선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각각 최대 3천만원과 5천만원의 사업화지원금과 함께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충북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본격 추진

산림복지과, 2020.03.26.



국토
정책



충북도는 올해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청주 오창과학 산업단지, 제천 제1·2산업단지, 음성 대풍산업단지 3곳에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6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착공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 추경을 통해 착수한 충주 제1산업단지 차단숲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드론’ 투입, 현황 점검

종합건설사업소, 2020.03.26.

진행

도시
정책

충남종합건설사업소가 올해부터 손실보상업무와 각종 건설공사의 현황 점검을 ‘드론’을 투입해 확인한다.

중건소는 그동안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손실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승인 일에 맞춰 직접 현지 사진촬영을 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에 의존했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데다, 세부 판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특히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곳은 현지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 고화질 촬영을 진행, 취득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산간지역 등도 정밀하게 촬영, 신속하고 투명한 현지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 7개 마을 선정

주택건축과, 2020.03.25.



전북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쾌적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2020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으로 도내 7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거 경관개선 사업은 기존 틀을 벗어나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마을에는 앞으로 75억원(도비 37.5, 시군비 37.5)의 예산이 투입돼 지붕과 담장 정비, 소공원 조성과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공용주차장 및 주민쉼터 등이 조성돼 살기 좋은 마을의 기본 틀이 갖춰질 전망이다.

경북도, 지역관광의 차별화된 성공모델 추진

관광정책과, 2020.03.18.



경북도는 포항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활성화'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관광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0억원을 투입해, 일본인가옥거리 테마형콘텐츠 개발, 구룡포예술공장 활성화, 구룡포 해양먹거리개발, 호미반도권 관광자연계상품개발, 청년창업 및 정착유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관광지와 관광시설 건립 등 자본사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주민 관광조직체 운영 등 경상적 성격의 사업이 주로 추진된다.

경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건축주택과, 2020.03.19.



경상남도가 청년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1억 9500만원 규모로, 총 13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5년 조정 가능하다.

올해 임대·임차인 모집방식은 기존의 행정중심의 공모방식에서 나아가 실수요자인 청년 등이 살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시·군별 청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등과 협업방식으로 다원화 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승인

노인장애인과, 2020.03.12.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전 세계 회원 도시의 고령친화 정책 정보,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노인은 물론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가 추진된다.

실행과제는 여가 분야 노인문화센터 운영, 통합 분야 관내 중·고교-경로당 자매결연, 의사소통 분야 세종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강화, 환경 분야 노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주거 분야 독거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교통 분야 마을택시 운영, 참여 분야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돌봄 분야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운영 등도 실행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3개년 실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고령친화적 시책 발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

도시경제과, 2020.03.11.

완료

도시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D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16일 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 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위치·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 했다.

본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환자에 한정해서 이동 경로 등을 지도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청, 분기별 안전사고 하자제로 협의회를 통해 공공건축물 안전·품질 확보

공공시설건축과, 2020.03.24.

진행

건축
정책

안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 해 「공공건축물 안전 사고 및 하자 제로(ZERO)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개최 배경은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여 향후 건축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행복청 공사관리관, 현장관계자가 모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장별 안전·품질관리 우수사례 등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품질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주택정책과, 2020.03.12.

진행

주택
정책

부산시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루어 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남도, 도시재생컨트롤타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지역계획과, 2020.03.30.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30일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광주전남연구원에 개소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특화 도시재생모델 발굴을 비롯해 정부공모에 선제적 대응,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컨설팅 등의 기본적인 업무추진과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해 재생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회복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도시재생사업 46곳이 선정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공모에 뉴딜사업 10곳과 소규모재생사업 6곳 등 총 16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온 힘을 쏟고 있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